

시론



주홍
자유예술가

“이란 여자초등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폭탄이 떨어져서 180여 명이 사망했어요. 이런 전쟁에 무슨 명분이 있어요? 전쟁은 최악의 범죄죠.”

12살 소녀가 말했다. “전쟁은 무조건 안돼요!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부르고 그 원망은 대를 이어가니까요.” 소녀의 목소리가 내면에서 메아리치고 있었다.

“어른들 맘대로 전쟁은 안돼요! 우리는 친구예요!” 이스라엘의 소녀와 이란의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그 소녀의 말을 받아서 적었다. 그렇게 전쟁 반대 생명평화미술행동의 만장 걸개그림이 완성됐다.

내 마음속 이스라엘 소녀와 이란 소녀는 다정하다. 서로 친구라서 두손꿌(두바이 쫌

전쟁을 멈추라!

득 쿠키)도 나눠 먹는다.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환한 웃음만으로 그 모든 것이 통한다. 내 마음속 소녀들은 혐오하지 않고 그 자체로 사랑한다. 중동을 전쟁과 불바다로 만들어 놓고 권력을 지키고 돈을 버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 원한을 어찌 할까!

뉴스에서는 노벨평화상을 꿈꾸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이란이 스스로 초등 학교를 폭격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학교에 떨어진 그 폭탄, 이란은 절대 구입할 수 없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다. 크약무도하다.

광주에는 5·18민주광장이 있다. 세상의 평화가 깨졌을 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부당한 사건으로 공동체가 위협당할 때, 민주시민들이 나서서 발언하고 토론하며 노래하고 춤추고 그림 그리며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밝은 길을 내는 곳, 민주광장이 있다. 중동전쟁에서 어린 학생들의 참혹한 참사 소식에 지역의 미술가들과 지식인들이 ‘생명평화미술행동’을 했다.

3월10일 이후, 광주 민주광장에는 열세 명(홍성담, 전정호, 박성우, 고근호, 전상보, 홍성민, 김화순, 박성완, 한희원, 김희련, 박태

규, 임영희, 주홍)의 미술인들이 각각 전쟁 반대 그림을 들고 모였다. 김순흥 교수, 장현권 목사, 황광우 작가, 김원중 위원장, ‘평화수호 전쟁반대’ 피켓을 들었던 이신 위원장, 배진하 정치인 등 지역의 어른들과 시민사회 대표들도 행진에 함께 했다.

“당장 전쟁을 멈추라!” “평화를 가장한 전쟁을 멈추라!” 아이를 잃고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그린 그림 앞에서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며 가슴 아파했고, 미제폭탄이 비처럼 떨어지는 전쟁 현장을 그린 그림 앞에서는 ‘전쟁범죄자는 지구를 떠나라’고 외쳤다. 그림을 들고 탑들이 하듯 분수대를 돌며 시민들과 함께 전쟁 반대를 외쳤다. 민주광장의 오일 영령들이 걸음걸음 함께하는 느낌이 들었다.

전쟁은 항상 평화를 외치고 애국의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끝은 참혹한 살상과 삶의 파괴다. 복수는 복수를 부르는 것이다. 광장 시계탑에서 오후 5시18분,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렸다. 문득 12·3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우리도 전쟁에 휩싸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계엄을 막아냈고 ‘빛의 혁명’으로 평화를 찾고 일상을 회복한 것이다. 민주광장을 가득 채운 응원봉의 불빛, 노벨평화상 후보가 된 민주시민의 힘이 평화를 지킨 것이다.

社說

소재지 놓고 또 꼬이는 전남권 통합 의과대학 신설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 양 대학 모두 의대 위치를 강력 희망하고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다. 순천대의 경우 학생,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대학본부보다 더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정원 100명 배정을 공식화했다. 전남의 숙원이 현실화된 것인데, 의대 소재지를 놓고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교육부가 통합 신청서에 본부 위치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당초에 전남도와 3차 업무협약에서 대학본부와 의대를 분리 배치기로 한 만큼 의대를 가져오기 위해 본부를 서로 미루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4월 중 학교별 정원 배분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늦어도 이달 말에는 판가름이 나야 하지만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미지수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순천과 목포 중 어느 한 곳에만 의대가 설립되면 탈락한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립의대 50명, 공공의대 50명으로 분할

하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나 교육부는 거리 상의 문제도 있고, 동부와 서부권 의료 여건이 상이한 측면까지 고려돼야 함에도 지나치게 신중한 입장이다. 전국의 대학들이 한 개의 의대를 한 곳에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지금은 어느 한쪽의 양보를 바랄 수도 없다. 이대로면 또 합계부기를 해야 하고 다시 꼬일 판이다. 물리적 ‘데드라인’을 넘어설 우려도 제기된다. 초광역 행정통합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하지만 초대 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6·3 지방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오롯이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서둘러 찾아야 하는 때다. 전남광주특별자치 출범을 앞두고 적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

전남도는 우선적으로 통합을 성사시킨 뒤 대학본부와 의대 소재지를 정하자고 제안했다. 대학들에 공을 넘긴 모습이다. 30년 임원인 전남권 의대 신설이 암초를 만났다. 더 이상의 차질은 안 된다. 전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중동발 오일쇼크 광주·전남도 민생 안정에 총력을

중동사태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도 TF를 가동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는 물가 모니터링단을 통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생필품 가격 동향을 월 3회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전남도는 종합 대응 모니터링 강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기업 지원 등에 착수했다. 아울러 가짜 석유 유통·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 단속과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등도 함께 검토한다.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다. 원유 해상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상선들이 잇따라 이란의 공격을 받는 등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경제·산업별 동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분석하고 실질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에 파급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권영준(순천·광양·곡성·구례)은 국회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란 공습 직후 1주일간 보통휘발유는 11.6%, 경유는 19.6% 올랐다. 실물 경제 전체에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수

치다. 물가와 직결되고 이는 또 금리와 연결되는 구조다. 환율 뿐 아니라 생산과 소비, 투자까지 복합적이다.

정부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정유사 공급가로 1당 1천800원을 기준점 삼아 2주 단위로 시장 여건을 봐가며 운영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유류세 인하도 검토되고 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까지 2개월 연장으로 했다. 1당 1천700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지원하는 제도도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0% 높은 경우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등의 운행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0일 이상의 비축분을 확보해 단 시간에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분류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으나 유가를 낮추는 데는 큰 도움을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민적 고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해서 과도한 폭리를 취하려는 사재기,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부터 발본색원해야 한다. 광주·전남도 역시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비상체제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문화난장



이 세 언
광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최근 4개월 된 아기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정인이 사건’을 떠올린 이들도 많았을 것이다. 관련 기사 댓글에는 “주변 사람들은 몰랐을까?”, “아이의 울음소리를 못 들었나?”라는 안타까운 질문이 이어졌다. 이는 누군가를 향한 책임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과 탄식일 것이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그렇기에 외부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하거나 발견하기 쉽지 않다. 특히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일수록 아이의 울음을 들어도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간절한 구조 신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많은 이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이유는 관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가족 회복’의 시작

혹시 오해한 것은 아닐지,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는 오지랖은 아닐지 혹은 신고 사실이 알려져 곤란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안전하다. 112에 전화해 의심 정황을 알리기만 하면 된다. 필요한 정보는 경찰이 차분히 안내하고 확인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되며, 업무상 수차례 신고를 경험한 필자도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은 신고가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학대도 판단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자가 시작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은 물론, 보호자 양육 상담과 교육, 심리치료, 가족관계 개선 활동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을 통해 무너진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아이가 안전하게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돕는다.

실제로 처음엔 거부감을 보이던 가정도 지속적인 상담을 거치며 변하는 경우가 많다. ‘왜 오냐, 또 오냐, 언제까지 오냐’라고 했던 보호자가, 사례 종결쯤 “그때의 위기를 기회 삼아 가족이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렇듯 아동학

대 신고는 누군가를 고발하는 행위가 아니라, 가정이 변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인 것이다.

안타깝게도 최근 통계에 따르면 광주시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와 민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5년 초목우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와 협력해 편의점을 통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는 ‘우리 동네 히어로 편의점’을 실시했고, 이는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외 멘토링, 심리치료 지원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며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광주·전남 통합이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공공과 민간의 보호 체계 또한 촘촘하게 공유되어,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안전망이 더욱 견고해질 필요가 있겠다.

아동학대는 한 사람의 힘으로 발견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우리 사회가 함께 살피고 위험 신호가 보일 때 조금 더 용기를 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이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전화 한 통이 아이의 삶을 지키고,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취재수첩



정 해 선
지역특집부 국장

목포시가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표’를 시정 구호로 내걸고 인구 유입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역 소멸 위기와 청년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정책이 실제 청년들의 정착과 유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언적 구호를 넘어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와 주거, 돌봄, 복지, 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활 환경이 갖춰질 때 비로소 청년이 머무는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이유가 고용 불안인 만큼 단순한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일자리 기반이 필요하다.

“청년이 찾는 큰 목표”...구호 넘어 삶의 도시로

해양·수산·관광·문화콘텐츠 등 지역 특화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노력도 요구된다.

청년 창업 환경 개선도 과제다. 스타트업 육성, 창업 인프라 확대, 초기 자금과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안에서 도전과 성장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부담 완화와 디지털 전환 교육,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실질적 지원도 필요하다.

주거 안정 역시 청년 정착의 핵심 요소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공급, 전·월세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고,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직주근접형’ 주거 모델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료와 돌봄 체계 개선도 중요하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심야·주말 의료 체계 확충과 긴급·휴일 돌봄 확대, 출산·육아 지원 강화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은 젊은 세대의 생

활 안정과 직결된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이어지는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역시 청년 세대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도시의 매력과 삶의 질이 곧 청년 유입 경쟁력이므로 문화와 여가 인프라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공연·전시·축제 활성화와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등을 통해 ‘일하는 도시’를 넘어 ‘살고 싶은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년 정책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청년이 직접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청년 정책은 개별 사업이 아닌 상호 연결된 생활 생태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한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가 곧 목표의 미래”라는 말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청년이 일하고 살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결국 ‘청년이 찾는 큰 목표’는 정책의 숫자 가 아니라 청년의 삶속에서 증명될 것이다.

* 독자투고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카시 광장
빌딩 숲에 잠들다
박경자
산도 바다도 더이상 설 곳은 못돼
도심 아파트 숲 속으로 몸을 던진 나는 더이상 내가 아닌 나
* 시작노트
순천말래미집 아파트 정원에 있는 조형물 앞을 지나다가 문득 드는 생각! 너희들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데...
나 역시도 내가 아닌 채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남의 자리에서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았다.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비 15,000원(1부 800원)